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무엇일까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전기신문에서 기자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게 사실이다. 최근 출입처가 변경되면서 원자력 분야를 맡게 됐다.

원자력 분야 기자가 된 뒤로 그동안 수십년 간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외쳐왔던 게 부질없었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원자력발전소로 출장을 간다는 기자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첫마디가 ‘무섭지 않아?’였기 때문이다. 원자력에 대해서도 이런데,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오죽할까.

그래서인지 지난해부터 원자력계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까지 구성해 관련된 활동에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사회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는 물론 대학생 등 일반 시민들과의 대화의 장을 열고 핵폐기물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확산시키기 위해 힘쓴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지금까지 전문가 강좌, 국내외 시찰, 각종 토론회 및 간담회,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또 이를 통해 임시저장, 중간저장 및 재처리·처분을 포함하는 최종 관리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짧은 기간 많이도 움직였고, 노력했다. 기술적인 부문에서는 수준을 상당부분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사회적 이슈가 되기엔 역부족일까.

단기간에 많은 성과물을 얻어내려는 전문가들의 욕심과 이에 대한 비전문가들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부 자문기구 성격에 그쳐 있는 공론화위원회의 위치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 논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최근 공론화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고 밝힌 바 있다.

투명한 토론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자력은 전기업계에 속해있으며, '원전 안전'은 '안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문이다.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더라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전기업계에 종사하고 안전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 만큼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용어설명

⇒ 사용후핵연료 = 핵연료를 원자로에서 연소시킨 뒤 더 이상 연료로 사용가치가 없는 것들은 임시저장수조에 옮겨 보관하게 되는데 이를 사용후핵연료라 함. 이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서 장기간 많은 열과 방사선을 방출, 냉각과 차폐 등을 통한 관리가 필요함.

현재 이를 임시저장하고 있는 원전 내 시설은 점차 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진주 기자
한국전기신문사